육아정책 소식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12월 30일(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 결과, 2016년도 보육정책은 ① 맞춤형 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④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

① 맞춤형 보육

-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대상	지원
종일반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	12시간 (07:30~19:30)
맞춤반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7시간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시간제 보육반	가정양육 중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	월 40~80시간
시간연장 보육	2~3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으로 가구여건 상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보육 19:30~24:00, 24시간보육 7:30~익일 7:30

② 보육지원 내실화

-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15년 대비 6%), 장애아보육료는 8% 인상
-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하여('16년 부모교육 지원 관련 예산 11.3억원)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 확충 계획

④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강화,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소양 등을 점검 하는 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 추진
-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3만원 인상('15년 월 17만원 → '16년 월 20만원)
- 보조교사도 '16년에 지속적 지원 예정(12,344명)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1월 28일(목)에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제목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유아교육과 관련한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유아교육 관련 주요 업무계획

- 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아모집 방식 개선
 -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통해 원아모집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원아모집 방식을 개선한 우수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 '17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② 유치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제고
 - 시범운영 중인 “유치원교원 능력개발 평가”를 '17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16.상) 및 평가 모델 개발('16.하)
 - 누리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신규교원 연수 강화, 기존 교원에게는 맞춤형 원격 연수 등 추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 ③ 누리과정 현장 안착 지원
 -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지출 경비 지정('15.10)
 -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경비를 미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 '17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미편성액 감액
- ④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
 - 다문화 유치원 ('15) 30개원 → ('16) 60개원 목표
- ⑤ 체감도 높은 사교육 대책 수립을 위해 사교육비 통계 조사 개선
 - 유아(만3~5세) 대상 사교육비 조사 실시방안 마련('16), '18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 추진(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 ⑥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시행
 - 아동학대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
 -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확대 계획('15.8월) 55.7% → ('16년) 90%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면 교육 강화 등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한다고 1월 12일(화) 밝혔다.

보육교사 실습생의 대면교육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과목에 대하여는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시기를 다르게 운영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되며, 보육교사 3급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5년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2015년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12월 18일은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총 4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3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였다. 금번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근거 규정 마련(법통과 4.30) 이후 기존에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5년 12월 19일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기준)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한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월 25일(목) 발표하였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별하여 방문한다. 금번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한 후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실시를 안내, 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며,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